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 김 호 □정책위원장:임효창 □사무총장: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http://www.ccej.or.kr) withccej 후원 008-01-0567-507(국민)

-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백인길 이사장)
- 문의 : 도시개혁센터(김성달 국장, 윤은주 간사, 02-3673-2146/dongi78@ccej.or.kr)
- 시행 : 2021. 5. 13.(총 10매)

# 애초부터 잘못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우리는 결코 1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시민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 답하다 -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강행 의지 재확인  
역사 유적 보존과 월대 복원 위해서는 체계적 종합 계획 세워야  
줄속 추진한 관료와 추인한 오 시장에게 반드시 책임 물을 것**

황당한 답변서(\*별첨 참조)였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사 중단과 재검토가 마치 예산 낭비인 것처럼 답변했다. 4월 말까지 250억원, 전체 791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대행 체제에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 공무원들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선거 기간에 오세훈 후보가 밝힌 광화문광장 공사 반대와 재공론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1. 답변서에서 서울시는 (1) 이미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사업을 계속하겠다. (2) 작년 하반기 공사 추진은 사전행정절차가 2020년 9월에 마무리됐고,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이 2020년 7월에 착수됐기 때문이다. (3) 철학과 판단 기준이 달랐을 시기에 소임을 다한 담당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4) GTX-A 노선의 광화문역 신설 문제는 현재 검토 중이며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답변 내용은 모순과 역지로 점철돼 있다. (1)에서 말한 예산 투입은 직무대행 체제의 서울시 관료들이 무리한 착공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무리한 결정 때문에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제는 그 투입된 예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형적인 알박기 논리다. 시민단체들은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논의를 재개하자는 것이다. ‘세금 낭비’ 운운은 적반하장 아닌가.

(2)의 답변대로 ‘사전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재개했다면 고 박원순 시장 시절의 공론화는 시민단체들을 들러리 세운 것이다. 서울시는 2019년 9월 이후 시민단체들과의 집중적인 공론화에도 교통 대책과 광장 형태 등에 합의하지 못했고, 박 시장은 사망 직전 사업 중단 뜻을 밝혔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 역시 알박기 논리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이 사업을 광화문광장 사업과 시기를 맞추려 했다면 2020년 7월에 먼저 착공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심지어 이 사업은 지난 5월5일 완공됐다. 역사 유적이 대거 발굴됐고 월대까지 복원하겠다는 광화문광장 사업의 완공 시기는 이제 예상조차 어렵다. 두 사업의 사업 시기를 무슨 수로 맞추겠다는 것인가?

심지어 서울시는 동절기 공사 금지 규칙을 어긴 일에 대해 ‘일부 공사는 보도블록 클로징 11 예외 규정에 따라 시행’이라고 답변했다. 한겨울에 공사를 강행해놓고, 공사 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역지다.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입한 겨울철 공사 금지 규칙은 폐지된 것으로 이해하겠다.

(3) 답변은 더욱 황당하다. (1)에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이미 투자된 예산 낭비가 우려돼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시민, 시민단체와의 합의 없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결정을 누가 했는지, 그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다. 그런데 이것을 ‘철학과 판단 기준이 달랐을 시기에 소임을 다했다’고 얼버무렸다. 대행 체제 시절, 서울시 공무원들의 철학과 판단 기준이 과연 누구와 달랐는가? 당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듯 주권자인 시민과 달랐던 것 아닌가? 집행 기관에 불과한 관료집단이 주권자인 시민과 의견이 달랐을 때 관료 마음대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은 타당한가? 이것이 대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가? 주권자를 무시하는 관료집단의 궤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존의 행정 조직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그 방식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일방적 재개와 공사 강행에 대해 내부 감사를 해야 한다.

2.

4월 27일 오세훈 시장이 밝힌, 역사성을 복원하는 ‘보완 발전 추진 방침’ 역시 위기에 처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부지에서 지속적으로 역사 유적이 발굴되고 있다. 역사성 복원은 높은 수준의 시민 합의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박 시장 시절의 공론화 과정에서,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에 대한 논의를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역사광장 논의는 담당 기관인 문화재청이 주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발굴 조사와 역사적 고증, 시민 합의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행히 이 주장이 반영되어 박 전 시장 시절의 광화문광장 공론화 과정에서는 역사 복원 문제가 분리됐다.

그런데 최근 광화문 서측의 7개 구역의 문화재 조사에서 삼군부와 사헌부 등 조선 정부의 핵심 기관들의 건물터와 여러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서울시는 발굴된 유적과 유물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부랴부랴 발굴 현장을 언론과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 올해 10월까지 서측 광장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굴된 역사 유적과 유물에 대한 종합계획은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서측 광장에 나무를 심기 위해 졸속으로 발굴 조사를 하고 덮을 계획이었고, 종합적인 매장문화재 발굴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오세훈 시장이 성급하게 제시한 광화문 월대 복원은 광화문 서측 발굴 조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발굴 공간 확보를 위한 우회도로 공사와 실제 발굴 조사에 최소 1~2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 월대를 복원하려면 창덕궁 앞 월대 복원 과정에서 봤듯 광화문 앞 지표면의 높이를 몇 m나 깎아내야 한다. 이것은 졸속으로 조성한 광장 동쪽 차도나 새로 조성할 서측 광장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듯 월대 복원은 종합적인 발굴 조사와 보존, 복원, 활용 계획이 없다면 선불리 손대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시민 공론화가 필수적임은 말할 것도 없다.

현재 상황에서 서울시가 서측 광장 조성 과 월대 복원을 추진한다면 제대로 된 역사 유적 복원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역사 유적의 훼손과 파괴로 끝난 청계천 복원 사업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은 지난 2008년 서울시 신청사를 지으면서 등록 문화재인 구청사의 대회의실을 파괴한 전력도 있다. 따라서 오 시장과 서울시가 광화문의 역사성을 제대로 회복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광화문광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3.

서울시는 답변에서 ‘앞으로 시민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 이미 기존 계획대로 광화문광장 공사를 재개하고, 월대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뭘 논의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공론화가 아니라, ‘들러리 세우기’라고 한다. 지금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관료들이 말하는 사후 시민 공론화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관료 중심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답은 간단하다. 이미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않겠다. 공론화는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지 결정을 추진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공사를 중단하고 진정한 대화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오 시장과 서울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오 시장과 관료들의 시대착오적인 공론화, 의사 결정, 집행 방식을 고발하겠다. 다시는 이런 낡은 시장과 관료들이 서울시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대로라면 광화문광장은 모양만 바뀔 뿐,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2009년 광화문광장의 시즌2가 될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지금 오 시장과 서울시 관료들은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1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끝”

\*별첨: 시민사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서울시 답변서

2021년 5월 13일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별첨.

# 시민사회단체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

2021. 5.

## 도 시 재 생 실

(광화문광장추진단)

# 목 차

1. 시민사회단체의 주장대로 원상회복이 아닌 지금 현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할 의사가 있는가? ..... 1
2.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현재 얼마나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투입된 예산 내역은 얼마인지 정확한 보고를 받았는가? 보고를 받았다면, 그 상세내역을 서울시민들에게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 ..... 1
3.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330회 서울시의 시민소통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공론화를 재개할 의향이 있는가? ..... 2
4. 오세훈 시장은 겨울철 공사 강행과 부실공사에 따른 재공사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받았는가? 예산부터 써버리면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혈세낭비를 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 3
5.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GTX 광화문역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가? 예비타당성 1차, 2차 용역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 오세훈 시장은 GTX 광화문역사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4

1. 시민사회단체의 주장대로 원상회복이 아닌 지금 현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할 의사가 있는가?

〈 답 변 〉

- 시장 취임 이후 광장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해 깊이 숙고하였고, 서울시는 깊은 검토와 토론, 숙고 끝에 광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되, 현재 안을 보완·발전시켜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가능한 한 행정의 연속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돌이킬 경우 약 400억 원이란 귀한 시민의 세금이 허공에 사라지고 만다는 점을 고려한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현재 얼마나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투입된 예산 내역은 얼마인지 정확한 보고를 받았는가? 보고를 받았다면, 그 상세내역을 서울시민들에게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

〈 답 변 〉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의 공정률이나 투입된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5월초 기준으로 공정률은 36%이고 예산은 총사업비 791억원 중 공정률 기준으로 약 25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일부는 기성금으로 지출되었으며, 잔액은 공사 후 업체의 청구에 의해 지출할 예정입니다.
- 투입된 예산 상세내역은 서울재정포털 등을 통해 시민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330회 서울시의 시민소통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공론화를 재개할 의향이 있는가?

〈 답 변 〉

- 광화문광장을 중앙에서 편측으로 옮기는 재구조화는 과거에 결정된 행정적 결단을 부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시장 권한대행 기간인 작년 11월 16일 공사 착공 이후 이미 36% 공정이 진행되었고 약 25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현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시민공론화를 재개할 경우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시민들 간의 찬반 갈등이 야기되어 다시금 광화문광장을 대립의 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이 결정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조성과정은 물론 광화문광장 운영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논의과정에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오세훈 시장은 겨울철 공사 강행과 부실공사에 따른 재공사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받았는가? 예산부터 써버리면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혈세낭비를 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 답 변 〉

-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를 작년 하반기에 추진하게 된 사유는 작년 초부터 준비하여 진행한 사전행정절차가 하반기(20.9.22.)에 마무리되었고, 연속된 도로노선에서 시행하는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사업』이 '20.7월에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시민통행 불편과 주변 상권 영업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20년 하반기에 광장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는 동절기에는 세종대로 동측도로 공사분에 대해서만 우선 시행하였고, 동측 보도공사의 대부분은 동절기 이후에 시행하였으나 일부 경계석 등 공사는 '보도블록 클로징 11' 예외 규정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 아울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동절기 시방기준 준수, 치밀한 공정계획 수립, 철저한 품질관리 (기온에 따른 시공, 보온대책 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광화문광장에 대한 철학과 판단기준이 달랐을 시기에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5.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GTX 광화문역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가? 예비타당성 1차, 2차 용역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 오세훈 시장은 GTX 광화문역사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답 변 〉

- GTX-A 노선 광화문역 신설은 보행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녹색교통진흥지역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광역철도와 연계된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추진된 것이며, 현재 타당성조사 결과 및 사업관계자(국토부, 사업시행자)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5항 및 8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항) 본 과업은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으며,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와의 협상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8항) 역사위치, 출입구 계획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